



지역 현안 해결·국비확보 총력 다짐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과 송갑석 시장위원장 등 양측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2020년 국비예산 확보 총력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실행 기구 구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의 광주세계수영대회 지원단 출범 등 3개 항을 결의했다. /강경숙 기자 gskang@

녹색의 땅 전남 '친환경농업' 박차

전남도, 올해 1천342억 투입...농업분야 총사업비 23% 해당
 유기농 고품질 제품 생산 위한 기반 시설·유통 인프라 등 구축

전남도는 17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전국 최다 지역으로서,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을 다지기 위해 농업생산 분야 총 사업비(5천746억 원)의 23%인 1천342억 원을 들여 기반 조성고 소득 증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2018년 기준 4만 3천340ha로 전국(7만 8천669ha)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의 2019년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품목의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 전략은 △친환경농업 실천 소득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학교급식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과수·채소 품목의 인증면적 확대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등이다.

사업별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3개 사

업 155억 원을 지원해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준다. 또 토양 개량제 지원 159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276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117억 원 등 7개 사업 664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334억 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60억 원,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10억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10억 원,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70억 원 등 6개 사업에 497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급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의 ha당 지원 단가를 10만 원씩 상향해 과수 160만 원, 채소 140만 원을 지원하고 벼는 전년과 동일하게 12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과수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7억 원

을 지원한다.

보성, 담양, 영암에 있는 친환경농업 교육관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해 친환경 과수·채소 재배기술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유기농명인 등을 대상으로 과수·채소 유기농업 선진국 해외 연수를 추진해 유기농 과수·채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비 이외의 품목 점유율을 27%에서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 현지체험,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체험·교육·홍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단지 1개소, 180억 원을 국비 신규사업으로 확보했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 환경에 이르기까지 친환경농업 전반에 대한 육성 정책을 구상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기술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미래산업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19년 사업 기간(1~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실천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127억 원이다. 유기·무농약 등 인증단계, 논·밭, 재배 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유기농 인증의 경우 ha당 과수 14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 원, 벼 70만 원이다. 무농약의 경우 ha당 과수 12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 원, 벼 50만 원이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광주 '스쿨 미투' 연루 교사 운명은?

시교육청, 검찰 기소 여부 따라 해당 법인에 징계 요구

광주시교육청은 '스쿨 미투' 파문에 연루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조만간 해당 학교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징계 검토 인원이 수십명에 달하고 해임 이상 중징계 요구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여 학교 현장이 또 한 번 술렁이게 됐다.

시교육청은 교내 성 비위 의혹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 결과 처분이 통보된 교사들의 징계요구 여부를 수위 결정을 위한 막바지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 면담 기록지, 수사 기관 처분 내용, 해당 교사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중 해당 학교에 징계요구를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가 검토된 교사는 A고 19명, B고 11명, C고 4명 등 3개 학교 총 34명이다.

이 가운데 A고 7명, C고 2명 등 9명은 불구속기소돼 중징계 요구가 유력하다. A고 12명, B고 11명, C고 2명 등 다른 25명은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상당수는 징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B고에서는 추가로 5명이 수사를 받았지만, 아직 검찰로부터 결과 처분이 통보되지 않아 이번 검토 대상에서는 빠졌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성비위가 아닌 폭언·욕설 등 행위가 드러난 교사들도 폭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시교육청은 아예 논란이 되는 행동이 없었던 교사가 아니더라도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요구를 검토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美국방부 '5·18 기밀문서' 열람 추진

5·18기념재단, 주한미국대사관 통해 협조 요청

5·18 기념재단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수집·보고했던 김용장 전 미군 501여단 방첩 정보 요원의 증언 내용을 토대로 미 국방부 기밀문서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5·18재단은 조만간 '미 국방부 문서(기밀 해제 대상) 공개에 협조해달라'고 주한 미국대사 등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기록물 열람도 요구하고, 5·18 집단발포 배후를 살필 수 있는 문건을 찾을 계획이다.

지난 2017년 팀 셔록 미국 기자가 광주 시와 5·18기록관 등에 기증한 3530쪽 분량 문서(체로키, 미국 중앙정보부 기밀문서, 국무부-주한 미국대사관 사이 오간 전문 등)는 국무부 기록이 70~80%에 달한다. 국방부 기록은 10~20%에 불과하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재단에서 미국 국가기록원 등을 통해 직접 확보한 미 국방부 자료는 없고, 전문가들에게 전달받은 자료만 일부 갖고 있다"며 "발포 명령 관련 내용이 보고됐 것으로 추정하고 자료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임이사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기밀문서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